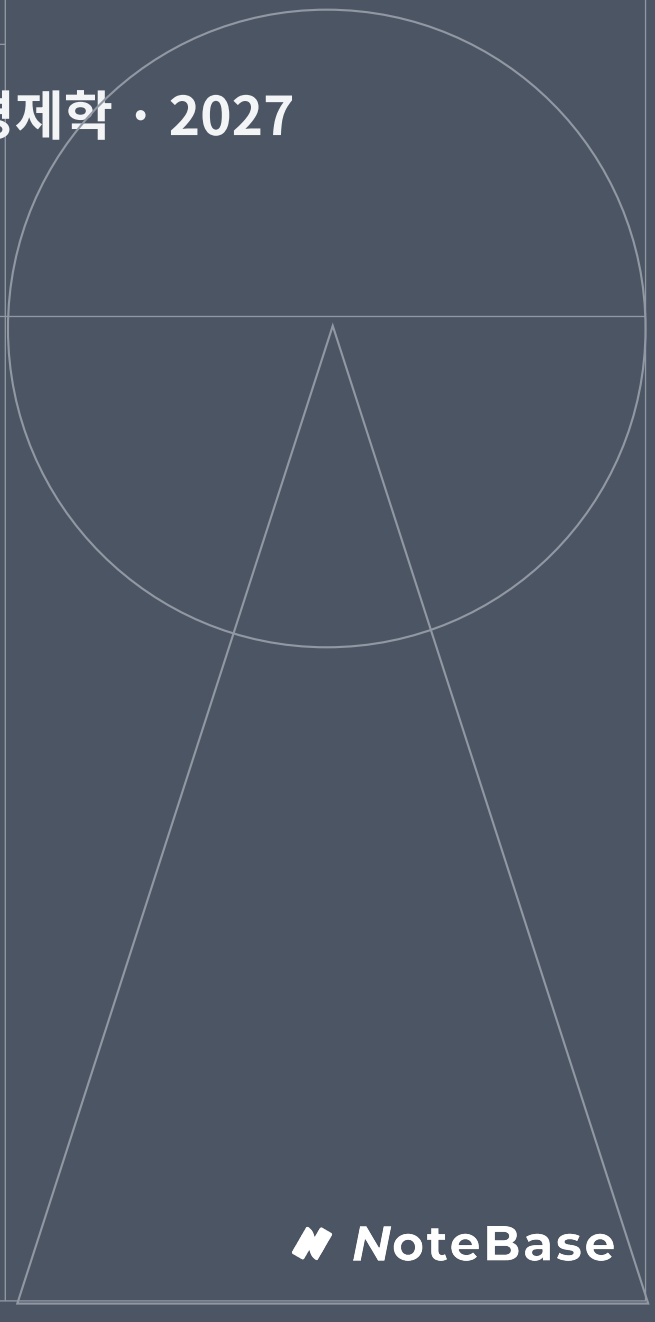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경제학 · 2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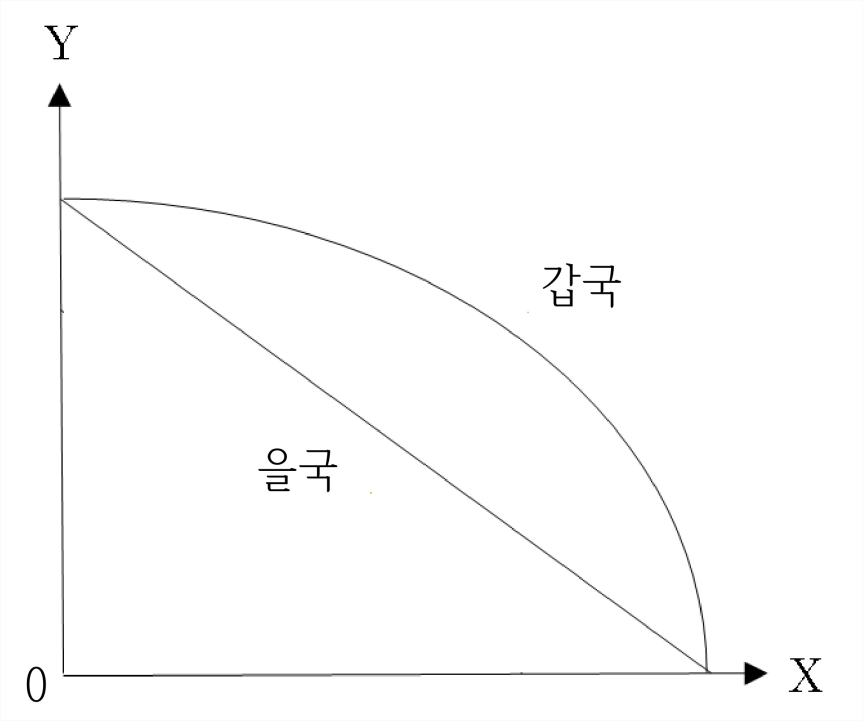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경제학 · 2027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경제학 · 2027

문 1. 갑국과 을국의 생산가능곡선이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갑국에서 X재 생산이 늘어날수록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② 을국에서 Y재 생산이 늘어날수록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③ 같은 양의 X재 생산에 필요한 기회비용은 항상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④ 갑국의 효율적인 생산점이 을국에서는 비효율적인 생산점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갑국의 생산가능곡선은 X재 생산이 늘어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팔라진다. 추가 X재를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Y재가 많아지므로 **X재의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그림의 가로축은 X재, 세로축은 Y재의 생산량이다. 갑국의 생산가능곡선은 바깥쪽으로 휘어 있고, 을국의 곡선은 두 축의 같은 절편을 잇는 직선이다. X재 한 단위를 추가 생산할 때 포기하는 Y재의 양은 생산가능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으로 읽는다.

① O: 갑국의 곡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가팔라진다. 따라서 X재 생산을 늘릴수록 추가 X재 한 단위를 위해 포기해야 하는 Y재가 많아져 **X재의 한계기회비용이 증가**한다.

② X: 을국의 생산가능곡선은 직선이므로 기울기가 일정하다. 따라서 X재로 표시한 Y재의 기회비용도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Y재 생산이 늘수록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곡선이 아니다.

③ X: X재 생산량이 적은 구간에서는 갑국 곡선이 을국 직선보다 완만하므로 갑국의 추가 X재 생산 기회비용이 더 작다. X재 생산량이 큰 구간에서는 갑국 곡선이 더 가팔라진다. 따라서 기회비용의 크기는 **생산점에 따라 달라지며 항상 갑국이 큰 것은 아니다**.

④ X: 두 축의 공통 절편을 제외하면 갑국 곡선 위의 점은 을국 생산가능곡선 바깥쪽에 있다. 이는 을국이 주어진 자원과 기술로 **달성할 수 없는 생산점**이지, 생산가능곡선 안쪽의 비효율적인 점이 아니다. 공통 절편에서는 두 나라 모두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갑국에서 X재 생산이 늘수록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는 ①이 옳다.

NoteBase

문 2. 계획경제체제에 비해 시장경제체제가 갖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효율성 면에서 우월하다.

② 희소 재화를 자율적으로 분배한다.

③ 재화를 분배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④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권을 보호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시장경제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과 **가격기구에 의한 배분**을 중심으로 한다. 정부가 생산과 배분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계획경제의 특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시장경제에서는 가격이 재화의 희소성과 수요를 전달하고, 경쟁과 이윤 동기가 비용 절감과 소비자 수요에 맞는 생산을 유도한다. 이처럼 **분산된 정보와 경제적 유인을 활용**하는 것이 계획경제에 비해 갖는 효율성상의 장점이다. 다만 외부효과·독점 등 시장실패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모든 현실 시장이 언제나 효율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② O: 가계와 기업이 소비·생산·거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기구를 통해 희소한 재화가 배분**된다. 자율적 배분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양을 나누거나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③ X: 정부가 생산과 재화 배분을 직접 계획·결정하는 것은 **계획경제체제의 특징**이다. 시장경제에서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과 가격기구가 주된 배분 역할을 한다. 시장경제에도 재산권 보호, 시장실패 보완, 소득재분배 등의 정부 역할은 있으나, 정부의 직접 배분을 시장경제의 구별되는 특징으로 볼 수는 없다.

④ O: 시장경제는 개인과 기업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사용하며 그 수익을 얻는 **사적소유권을 인정·보호**한다. 자신의 선택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는 투자와 생산의 유인을 제공한다.

NoteBase

문 3.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 X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다음과 같다. 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 (P^*, Q^*)은? (단, P는 가격이고, Q는 수량이다.)

- 수요곡선: $Q_D = 24 - P$
- 공급곡선: $Q_S = 6 + 2P$

① $(P^*, Q^*) = (3, 12)$

② $(P^*, Q^*) = (6, 18)$

③ $(P^*, Q^*) = (8, 16)$

④ $(P^*, Q^*) = (18, 6)$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균형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므로** $24 - P = 6 + 2P$이다. 이를 풀면 가격은 6이고, 수요함수 또는 공급함수에 대입한 거래량은 18이다.

계산 과정

경쟁시장의 균형에서는 같은 가격에서 소비자가 사려는 수량과 생산자가 팔려는 수량이 일치한다. 따라서 주어진 두 함수를 **수요량=공급량** 조건으로 연결한다.

$24 - P = 6 + 2P$

가격항을 한쪽으로 모으면 다음과 같다.

$24 - 6 = 2P + P$

$18 = 3P$

$P^* = 6$

균형가격 6을 어느 함수에 대입해도 같은 거래량이 나와야 한다.

$Q^* = 24 - 6 = 18$

$Q^* = 6 + 2 \times 6 = 18$

따라서 **균형가격은 6, 균형거래량은 18**이며, 가격·수량 순서로 $(P^*, Q^*) = (6, 18)$이므로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4. 다음과 같이 수요와 공급이 주어진 완전경쟁시장에서 정부가 공급자에게 단위당 10의 판매세를 부과한다면 정부의 세수입은? (단, P는 가격이고, Q는 수량이다.)

- 수요곡선: $Q_D = 160 - 2P$
- 공급곡선: $Q_S = P - 10$

① 100

② 400

③ 800

④ 2,4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판매세는 소비자 지불가격과 공급자 순수취가격 사이에 10의 차이를 만든다. 세후 균형 거래량이 40이므로 **세수입은 단위당 세금에 세후 거래량을 곱한** $10 \times 40 = 400$이다.

계산 과정

세금 부과 후 소비자 지불가격을 P_c, 공급자 순수취가격을 P_p라 하자. 공급자에게 단위당 10의 판매세가 부과되므로 **두 가격의 차이는 단위당 세금**이다. 따라서 $P_c - P_p = 10$, 즉 $P_p = P_c - 10$이다.

수요량은 소비자가 내는 가격에, 공급량은 공급자가 세금을 내고 남기는 가격에 반응한다. 따라서 $Q_D = 160 - 2P_c$, $Q_S = P_p - 10 = (P_c - 10) - 10 = P_c - 20$이다. 공급함수의 기존 상수항 10과 새 세금 10을 구분해야 한다.

세후 시장균형에서는 $Q_D = Q_S$이므로 $160 - 2P_c = P_c - 20$이다. 이를 풀면 $3P_c = 180$, $P_c = 60$이다. 공급자의 순수취가격은 $P_p = 50$, 거래량은 $Q = 160 - 2 \times 60 = 40$이며 공급함수에서도 $50 - 10 = 40$으로 일치한다.

정부의 세수입은 **단위당 세금 × 세후 거래량**이다. 따라서 $T = 10 \times 40 = 400$이며 ②의 값과 일치한다. 소비자 가격 60에 거래량을 곱한 총지출이나 세금 부과 전 거래량을 사용하지 않는다. 문제에 별도 화폐단위가 없으므로 세수입은 주어진 가격·수량 기준의 화폐금액 400이다.

NoteBase

문 5. 고등어 가격이 10% 상승했고 수요량은 5% 감소했다. 고등어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_____㉠_____이며, 가격 상승 결과 고등어 판매로 인한 총수입은 _____㉡_____한다. ㉠과 ㉡으로 옳은 것은?

① ㉠: 비탄력적, ㉡: 증가

② ㉠: 비탄력적, ㉡: 감소

③ ㉠: 탄력적, ㉡: 감소

④ ㉠: 탄력적, ㉡: 증가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은 0.5로 **비탄력적**이다. 총수입은 가격과 판매량의 곱이므로 $1.10 \times 0.95 = 1.045$, 즉 **4.5% 증가**한다.

계산 과정

㉠의 판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비율이며, 탄력성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절댓값을 쓴다. 주어진 변화율을 적용하면 $\varepsilon = \left|\frac{-5\%}{10\%}\right| = 0.5$이다. **탄력성의 절댓값이 1보다 작으므로 비탄력적**이다. 이는 단위가 없는 비율이며, 수요량 감소의 음수 부호 때문에 비탄력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의 판단: 총수입은 가격과 판매량의 곱 $TR = PQ$이다. 처음 가격과 판매량을 각각 P_0, Q_0라 하면 변화 후에는 $P_1 = 1.10P_0$, $Q_1 = 0.95Q_0$이다. 따라서 $TR_1 = 1.10 \times 0.95 P_0 Q_0 = 1.045 TR_0$이므로 총수입은 **처음보다 4.5% 증가**한다. 두 변화율을 단순히 빼서 5% 증가라고 계산하면 가격과 수량의 동시 변화에 따른 곱의 효과를 빠뜨린다.

따라서 ㉠은 비탄력적, ㉡은 증가이며, 이 조합은 ①과 일치한다. 가격 상승률에 비해 수요량 감소율이 작다는 탄력성 판단과 실제 총수입의 곱 계산이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

NoteBase

문 6.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르는 노동시장에서 정부가 유효한 최저임금 수준을 높일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기업의 잉여는 감소한다.
나. 경제적 자중손실이 커진다.
다. 숙련 노동의 실업이 증가한다.
라. 전체 노동자의 측면에서 이득이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라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균형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표준 경쟁 노동시장에서는 **고용이 줄고 기업의 잉여가 감소**한다. 성립하지 못하는 유익한 노동거래도 늘어나 자중손실이 커지며, 고용을 잃는 노동자가 있어 전체 노동자의 이익은 보장되지 않는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유효한 최저임금은 경쟁균형 임금보다 높아 시장을 실제로 제약하는 임금 하한이다. 이 문항의 수요·공급 모형에서 이를 더 높이면 노동수요량은 줄고 노동공급량은 늘어난다. 실제 고용량은 기업의 노동수요량에 의해 제한된다.

가. O: 기업은 고용한 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량도 줄인다. 노동수요곡선 아래에서 임금지급액을 뺀 기업의 잉여는 이 때문에 **감소**한다.

나. O: 경쟁균형에서 서로에게 이득이던 노동거래가 최저임금으로 성립하지 못한다. 유효한 최저임금이 더 높아지면 고용량이 균형에서 더 멀어지므로, 이 표준 모형에서는 **자중손실이 커진다**.

다. X: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고용 제약은 주로 기존 임금이 최저임금 부근인 저임금·비숙련 노동에 나타난다. 숙련 노동의 임금이 새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그 시장의 임금 하한은 구속적이지 않다. 제시된 조건만으로 **숙련 노동의 실업 증가**를 일반적인 결과로 단정할 수 없다.

라. X: 계속 고용되는 노동자는 임금 상승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하지 못하는 노동자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노동자 집단 전체의 순이익은 노동수요의 반응과 고용 감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체 노동자에게 이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가와 나이며, 이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①이다.

NoteBase

문 7. 영수는 가격이 일정한 두 상품 X와 Y에 자신의 전체 소득을 쓰고 있으며 소비량은 모두 0보다 크다. 이때 X의 마지막 한 단위에 대한 영수의 한계효용은 100이고, Y의 마지막 한 단위에 대한 한계효용은 50이다. 영수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조건 중 옳은 것은? (단, 효용함수는 강오목하고 미분가능하다.)

① X와 Y의 가격이 같을 때이다.

② X의 가격이 Y의 가격의 두 배일 때이다.

③ Y의 가격이 X의 가격의 두 배일 때이다.

④ 추가적인 예산제약의 정보가 필요하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두 상품을 모두 소비하는 최적점에서는 **가격당 한계효용이 같아야** 한다. $\frac{100}{P_X} = \frac{50}{P_Y}$에서 $P_X = 2P_Y$이므로 X의 가격이 Y의 두 배이다.

계산 과정

조건 확인: 두 상품의 소비량이 모두 양수이므로 한 상품만 소비하는 모서리해가 아니라 **내부해의 효용극대화 조건**을 적용한다. 전체 소득을 지출하는 예산선 위에서, 미분가능하고 강오목한 효용함수는 한계조건을 만족하는 소비묶음의 최적성을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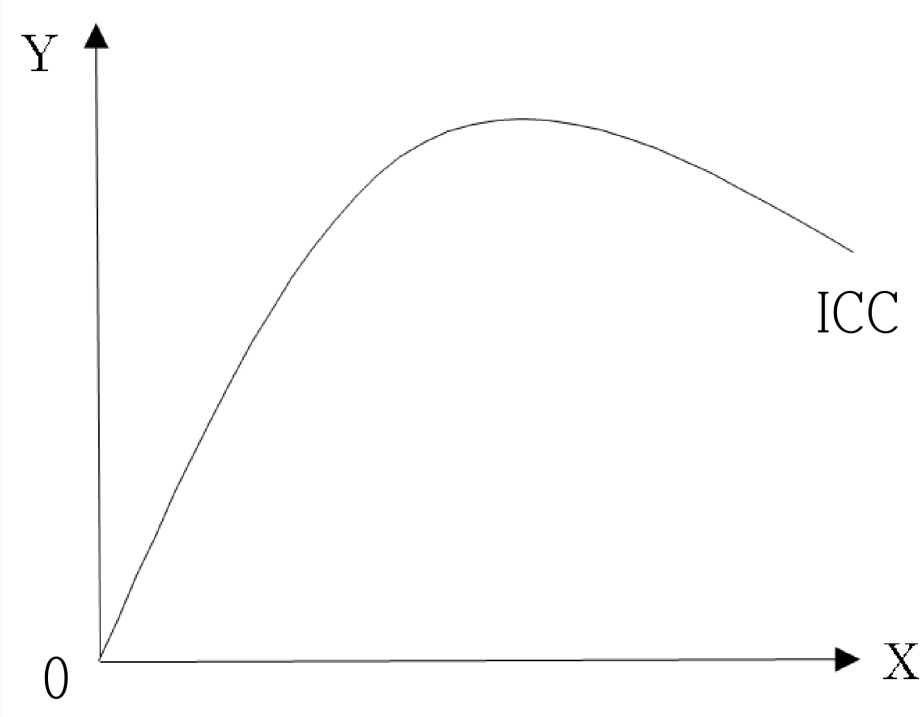
최적 조건: 가격을 P_X, P_Y라 하면 **지출 한 단위당 한계효용이 같아야** 한다. 즉 $\frac{MU_X}{P_X} = \frac{MU_Y}{P_Y}$이다. 한쪽 비율이 더 크면 다른 상품의 지출을 그 상품으로 옮겨 효용을 높일 수 있으므로 기존 소비묶음은 최적이 아니다.

가격비 계산: 주어진 한계효용을 대입하면 $\frac{100}{P_X} = \frac{50}{P_Y}$이다. 양변을 정리하면 $100P_Y = 50P_X$, 따라서 $\frac{P_X}{P_Y} = 2$이다. X의 한계효용이 두 배인 만큼 가격도 Y의 두 배여야 지출 한 단위당 한계효용이 같아진다.

결과 연결: 필요한 조건은 $P_X = 2P_Y$이므로 ②와 일치한다. 가격이 같거나 Y의 가격이 두 배이면 두 비율이 같아지지 않는다. 구체적인 소비량을 구하려면 추가 정보가 필요하지만, 여기서 묻는 가격비는 주어진 한계효용과 내부해 조건만으로 결정된다.

NoteBase

문 8. 한 소비자의 소득소비곡선(ICC)이 다음 그래프와 같을 때 X재와 Y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영역에서 X재는 열등재이다.

② 모든 영역에서 Y재는 정상재이다.

③ X재의 엥겔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갖는 부분이 있다.

④ Y재의 엥겔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갖는 부분이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ICC가 오른쪽 아래로 휘는 구간에서는 소득 증가에 따라 X 소비는 늘지만 **Y 소비는 감소**한다. 이 구간에서 Y는 열등재이므로 Y의 엥겔곡선에는 음의 기울기를 갖는 부분이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소득소비곡선은 재화 가격을 고정한 채 소득이 변할 때의 최적 소비묶음을 잇는다. 그림에서 소득 증가에 따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X 소비는 계속 늘지만, Y 소비는 처음에는 늘다가 곡선의 최고점을 지난 뒤 줄어든다. 엥겔곡선은 한 재화의 소비량과 소득의 관계를 나타낸다.

① X: X 소비량은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속 늘어난다. 따라서 그림의 범위에서 X는 **정상재**이지 모든 영역에서 열등재가 아니다. 열등재라면 소득이 증가할 때 그 재화의 소비량이 감소해야 한다.

② X: Y 소비량은 낮은 소득 구간에서 증가하지만, ICC가 오른쪽 아래로 휘는 구간에서는 감소한다. 따라서 Y는 처음에는 정상재이지만 이후에는 **열등재가 되는 구간**이 있어 모든 영역에서 정상재라고 할 수 없다.

③ X: 그림의 범위에서 소득 증가에 따라 X 소비량이 감소하는 구간은 없다. 따라서 X의 엥겔곡선에 음의 기울기를 갖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ICC 자체의 하향 부분은 X가 아니라 Y의 소비 감소를 나타낸다.

④ O: ICC의 오른쪽 하향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어날 때 Y 소비량이 감소한다. 따라서 Y 소비량과 소득을 두 축에 놓은 엥겔곡선에는 **음의 기울기를 갖는 구간**이 존재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Y재 엥겔곡선의 음의 기울기 부분을 지적한 ④이다.

NoteBase

문 9.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x, y) = \min\{2x, 3y\}$이고, x재의 가격은 3, y재의 가격은 2라고 한다. 만약 y재의 가격이 4로 변할 때, 이에 따른 대체효과는?

① 0

② 2/3

③ 3/2

④ 2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완전보완재는 가격이 변해도 기존 효용을 유지하는 최소비용 소비묶음이 그대로이다. 따라서 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는 0**이다.

계산 과정

효용함수의 성격: $u(x, y) = \min\{2x, 3y\}$는 두 재화를 일정 비율로 함께 소비하는 완전보완재의 효용함수이다. 가격이 모두 양수이면 불필요하게 한 재화만 더 구입할 이유가 없으므로 최적 소비묶음은 **꺾인점의 조건** $2x = 3y$를 만족한다. 즉 $\frac{y}{x} = \frac{2}{3}$은 소비비율이지 대체효과의 크기가 아니다.

보상된 소비묶음: 대체효과는 상대가격 변화에 대해 기존 효용을 유지하도록 보상했을 때 소비량이 얼마나 바뀌는지 본다. 기존 효용을 u_0라 하면 그 효용을 최소비용으로 얻는 묶음은 $x = \frac{u_0}{2}, y = \frac{u_0}{3}$이다. 이 묶음은 양의 가격 수준과 무관하므로 y재 가격이 2에서 4로 올라도 **같은 효용을 얻는 최소비용 소비묶음은 변하지 않는다**.

대체효과 계산: y재의 보상수요 변화는 $\frac{u_0}{3} - \frac{u_0}{3} = 0$이며 x재도 $\frac{u_0}{2} - \frac{u_0}{2} = 0$이다. 따라서 대체효과는 0으로 ①과 일치한다. 명목소득을 그대로 두면 구매력 하락으로 소비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는 소득효과이며 대체효과와 구별한다.

NoteBase

문 10. 아래와 같은 세 개의 복권이 있다. 어떤 소비자가 상금 x(만 원)에 대해 $U(x) = \sqrt{x}$의 기대효용함수를 가지고 있다면, 이 소비자의 선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L_1: 확실히 25만 원
- L_2: 1/2의 확률로 0원, 1/2의 확률로 100만 원
- L_3: 1/2의 확률로 0원, 1/4의 확률로 64만 원, 1/4의 확률로 144만 원

① 이 소비자는 위험중립적이다.

② 1/2의 확률로 복권 L_2를, 1/2의 확률로 복권 L_3을 주는 새로운 복권을 L_1보다 더 좋아한다.

③ 1/4의 확률로 복권 L_1을, 3/4의 확률로 복권 L_3을 주는 새로운 복권을 L_2보다 더 좋아한다.

④ L_2의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은 L_3의 위험프리미엄보다 작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L_2와 L_3의 기대효용은 모두 5이므로 확실성등가는 25만 원으로 같다. 기대상금은 각각 50만 원과 52만 원이므로 **위험프리미엄은 L_2가 25만 원, L_3이 27만 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상금 x의 단위는 만 원이다. 각 복권의 기대효용은 $EU(L_1) = \sqrt{25} = 5$, $EU(L_2) = \frac{1}{2}\sqrt{0} + \frac{1}{2}\sqrt{100} = 5$, $EU(L_3) = \frac{1}{2}\sqrt{0} + \frac{1}{4}\sqrt{64} + \frac{1}{4}\sqrt{144} = 5$이다. 따라서 세 복권의 기대효용은 모두 같다.

① X: $U(x) = \sqrt{x}$는 상금이 늘어날수록 추가 효용의 증가폭이 줄어드는 오목한 함수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위험회피적**이다. 위험중립자는 상금에 대한 효용함수가 선형이어서 기대상금만으로 선택한다.

② X: 복권을 다시 확률적으로 섞은 복권의 기대효용은 각 복권 기대효용의 확률가중평균이다. 따라서 $\frac{1}{2}EU(L_2) + \frac{1}{2}EU(L_3) = \frac{1}{2} \times 5 + \frac{1}{2} \times 5 = 5$이다. L_1의 기대효용도 5이므로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무차별**하다.

③ X: 이 혼합복권의 기대효용은 $\frac{1}{4}EU(L_1) + \frac{3}{4}EU(L_3) = \frac{1}{4} \times 5 + \frac{3}{4} \times 5 = 5$이다. L_2의 기대효용 5와 같으므로 이 경우에도 무차별하다.

④ O: 확실성등가 CE는 $U(CE) = EU$를 만족하는 확실한 상금이다. 두 복권 모두 $EU = 5$이므로 $\sqrt{CE} = 5$, $CE = 25$만 원이다. L_2의 기대상금은 50만 원, L_3은 $\frac{1}{4} \times 64 + \frac{1}{4} \times 144 = 52$만 원이다. 위험프리미엄은 **기대상금−확실성등가**이므로 L_2는 25만 원, L_3은 27만 원으로 L_2가 더 작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위험프리미엄을 비교한 ④이다.

NoteBase

문 11. 철수는 카페, 공예품 가게, 철물점, 서점 등 네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각 용도별 건물의 가치는 각각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이다. 철수가 철물점을 개업할 경우의 기회비용은?

① 200만 원

② 300만 원

③ 500만 원

④ 1,000만 원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철물점을 선택하면서 포기하는 용도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은 서점이다. 기회비용은 모든 대안의 합계가 아니라 **최선의 포기 대안인 서점의 가치 500만 원**이다.

핵심 풀이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 때문에 **포기한 대안 중 가장 가치가 큰 하나의 가치**이다. 건물을 이미 소유해 별도의 임차료를 내지 않더라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기회를 포기하므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철물점을 선택하면 카페 200만 원, 공예품 가게 300만 원, 서점 500만 원의 용도를 포기한다. 이 중 가장 큰 가치는 **서점의 500만 원**이므로 철물점 개업의 기회비용은 500만 원이며, ③과 일치한다.

200만 원과 300만 원은 포기한 대안의 가치이지만 최선의 대안이 아니다. 1,000만 원은 세 대안의 가치를 모두 더한 값으로, 건물 하나를 동시에 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회비용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선택한 철물점의 가치 400만 원이나 서점과의 가치 차이 100만 원도 기회비용 자체는 아니다.

NoteBase

문 12. 완전경쟁기업의 한계이윤이 감소한다면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한계비용의 증가

② 한계비용의 감소

③ 평균가변비용의 감소

④ 평균고정비용의 감소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완전경쟁기업의 한계이윤은 $P - MC$이다. 가격이 일정하므로 한계이윤이 감소하는 것은 **한계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핵심 풀이

완전경쟁기업은 시장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이다. 따라서 기업의 생산량이 변해도 판매가격 P는 일정하고, 한계수입은 $MR = P$이다. 한계이윤은 생산량 한 단위를 늘릴 때 이윤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므로 $\frac{d\pi}{dq} = MR - MC = P - MC$이다.

가격이 일정한 상태에서 $P - MC$가 작아지려면 **한계비용 MC가 증가**해야 한다. 따라서 한계이윤 감소와 직접 대응하는 것은 한계비용 증가이며 ①과 일치한다. 반대로 한계비용이 감소하면 한계이윤은 증가하므로 ②는 방향이 반대이다.

평균가변비용은 가변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계비용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 한계비용이 증가하는 동안에도 그 값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으면 평균가변비용은 감소할 수 있어, 한계이윤 감소만으로 평균가변비용의 방향을 단정할 수 없다.

고정비용이 양수일 때 생산량을 늘리면 평균고정비용은 감소하지만, 고정비용은 한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균고정비용 감소는 생산량 증가에 따른 별도의 성질이지 **한계이윤 감소를 설명하는 한계비용의 변화가 아니다**.

NoteBase

문 13. 빙하 아이스크림 회사는 한계수입이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완전경쟁기업이다. 현재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의 시장가격은 5,000원, 평균가변비용은 8,000원, 평균고정비용이 3,000원일 때, 이 회사가 해야 할 일 중 옳은 것은?

① 평균가변비용이 감소하도록 생산량을 줄인다.

② 평균고정비용이 감소하도록 생산량을 늘린다.

③ 가격이 평균고정비용을 초과하므로 생산을 계속한다.

④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으므로 생산을 중단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가격 5,000원은 평균가변비용 8,000원보다 낮아 **생산을 계속할수록 가변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한다**. 단기에는 고정비용이 남더라도 생산을 중단하는 편이 손실을 줄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완전경쟁기업에서는 시장가격이 한계수입과 같다. 그러나 MR=MC인 생산량을 찾는 것과 생산을 계속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별개이다. 단기에는 중단해도 고정비용이 남으므로, 생산을 계속하여 **가변비용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① X: 평균가변비용을 낮추는 것 자체가 기업의 목표는 아니다. 주어진 MR=MC 생산점에서 가격 5,000원이 평균가변비용 8,000원보다 낮으므로, 단순한 생산량 조정보다 생산 중단과의 손실 비교가 필요하다. 이 문제의 단기 의사결정은 생산 중단이다.

② X: 생산량을 늘리면 평균고정비용은 낮아질 수 있지만 총고정비용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가변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평균고정비용만 낮추려고 증산하는 것은 손실 최소화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③ X: 가격 5,000원이 평균고정비용 3,000원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 조업중단의 비교 기준은 평균가변비용**이다. 고정비용은 중단해도 부담하므로 가격과 평균고정비용의 비교로 계속 생산할지를 판단하지 않는다.

④ O: 현재 생산량을 Q라고 하면 총수입은 5,000Q, 가변비용은 8,000Q, 고정비용은 3,000Q이다. 생산을 계속하면 손실은 6,000Q이지만, 단기 중단 시에는 고정비용 3,000Q만 부담한다. 따라서 **생산을 중단하면 3,000Q만큼 손실을 줄인다**. 여기서 Q는 중단 전 주어진 생산량이며, 중단 후에도 남는 고정비용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다.

따라서 옳은 조치는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으므로 생산을 중단한다는 ④이다.

NoteBase

문 14. 세차장이 완전경쟁적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를 고용하여 세차 서비스를 2만 원에 제공한다. 이 매장에서 다섯 번째 직원을 고용했더니 한계수입이 10만 원이다. 다섯 번째 직원의 한계생산량은?

① 0.2대 세차

② 1대 세차

③ 5대 세차

④ 10대 세차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추가 직원이 늘린 수입은 세차 가격과 추가 세차량의 곱이다. 따라서 **한계생산량은 추가수입을 서비스 가격으로 나눈** 10만 원2만 원/대=5대이다.

계산 과정

수입의 의미 확인: 문제의 10만 원은 **직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하여 늘어난 수입**이다. 이는 세차 한 대를 추가로 판매할 때의 수입이 아니라 노동의 한계수입생산에 해당한다. 구하려는 한계생산량은 다섯 번째 직원으로 인해 늘어난 세차 대수이다.

공식 적용: 주어진 세차 가격 2만 원으로 추가 서비스도 판매하므로 추가수입은 서비스 가격과 추가 세차 대수의 곱이다. 다섯 번째 직원의 한계생산량을 MP_L라 하면 $\Delta TR = P \times MP_L$이며, $100{,}000 = 20{,}000 \times MP_L$이다. 노동시장의 완전경쟁 조건 자체에서 서비스 가격의 불변성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제시한 서비스 가격을 적용한다.

계산과 단위: $MP_L = \frac{100{,}000}{20{,}000} = 5$이다. 원 단위의 추가수입을 원/대 단위의 서비스 가격으로 나누므로 결과는 **추가 세차량 5대**이며 ③과 일치한다. 이는 직원 다섯 명의 총생산량이나 전체 직원의 평균생산량이 아니다.

NoteBase

문 15.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공공재가 과소 공급되는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나. 혼합전략까지 고려하더라도 내쉬균형은 유일하다.
다. 게임이 무한 반복되더라도 서로에게 배반하는 유일한 균형만이 존재한다.

① 가
② 다
③ 가, 나
④ 나, 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일회성 용의자의 딜레마에서는 배반이 엄격우월전략이므로 혼합전략을 허용해도 **상호 배반 균형이 유일**하다. 그러나 무한반복에서는 미래 보복의 위협으로 협력이 유지될 수 있어 일회성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보기별 해설

표준적인 일회성 용의자의 딜레마에서는 상대의 행동과 관계없이 각자에게 배반이 엄격우월전략이다. 두 사람이 협력하면 함께 배반할 때보다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얻지만, 각자의 개별적 유인 때문에 비협력적 결과가 나타난다.

가. O: 공공재 공급에 기여하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지만 편익은 다른 사람에게도 돌아간다. 각자가 다른 사람의 기여에 무임승차하려 하면 모두 기여하지 않는 결과가 생겨, 함께 기여하는 경우보다 공공재가 적게 공급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유인과 공동 이익의 충돌**을 용의자의 딜레마로 설명할 수 있다.

나. O: 표준적인 일회성 게임에서는 상대가 어떤 확률로 협력과 배반을 섞어도 배반이 더 높은 보수를 준다. 따라서 균형에서 협력에 양의 확률을 부여할 수 없고, 두 사람 모두 배반하는 **유일한 내쉬균형**만 존재한다. 혼합전략을 허용한다고 새로운 균형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 X: 무한반복게임에서는 현재의 배반에 대해 이후의 비협력으로 보복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미래 보수를 충분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미래 손실의 위협으로 **협력이 균형에서 유지**될 수 있다. 항상 배반하는 균형도 존재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균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가와 나이며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6. 두 사람이 1부터 9 사이의 정수 하나를 동시에 적어내는 게임을 생각하자. 만약 이들이 적은 숫자의 합이 10 이하이면 각자 적어낸 정수(만 원)만큼의 보수를 얻는다. 하지만 그 합이 10보다 크면 모두 아무 보수도 받지 못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쉬균형은 유일하다.

② 두 사람 모두 우월전략을 갖는다.

③ 내쉬균형에서 두 사람은 같은 정수를 선택한다.

④ 두 사람이 같은 보수를 얻는 내쉬균형이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두 사람이 각각 5를 선택하면 각자 5만 원을 받으며, 혼자 숫자를 높이거나 낮춰도 보수가 줄어든다. 따라서 **같은 보수를 얻는 내쉬균형 (5, 5)**가 존재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상대가 정수 b를 선택했을 때 자신의 보수를 가장 크게 하는 선택은 $10 - b$이다. 그보다 작게 쓰면 받을 보수가 줄고, 크게 쓰면 합이 10을 넘어 보수가 0이 된다. 따라서 **합이 10인 모든 정수 조합이 순수전략 내쉬균형**이며, (1, 9)부터 (9, 1)까지 9개이므로 유일하지 않다. 이는 순수전략 균형의 개수이며 혼합전략 균형까지 전부 9개라는 뜻은 아니다.

② X: 우월전략은 상대방이 무엇을 선택하든 자신에게 최선인 전략이다. 상대가 1을 쓰면 9가 유일한 최적반응이고, 상대가 9를 쓰면 1이 유일한 최적반응이다. **상대의 선택에 따라 최적반응이 달라지므로** 어느 쪽도 모든 상대 선택에 대해 최선인 전략을 갖지 않는다.

③ X: 내쉬균형은 상대의 선택이 고정되어 있을 때 어느 쪽도 혼자 전략을 바꾸어 보수를 높일 수 없는 상태이다. 두 사람의 숫자가 같을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1, 9)도 서로 최적반응**이므로 내쉬균형이며, 두 사람이 다른 정수를 선택한다.

④ O: 두 사람이 각각 5를 선택하면 합이 10이므로 각자 5만 원을 받는다. 한쪽이 혼자 5보다 크게 쓰면 자신의 보수가 0이 되고, 작게 쓰면 5만 원보다 적게 받는다. 따라서 **(5, 5)는 같은 보수를 얻는 내쉬균형**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중 경제적 지대가 임금 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직업은?

① 경찰

② 교수

③ 전문경영인

④ 프로스포츠 선수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프로스포츠 선수의 뛰어난 재능은 희소하고 쉽게 대체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 이처럼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인 특수 능력**은 보수에서 경제적 지대의 영향이 큰 대표적인 경우이다.

선지별 해설

경제적 지대는 어떤 생산요소를 현재 용도에 머물게 하는 최소 보수인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보수이다. 여기서는 직업별로 **특수한 능력의 희소성, 대체 가능성,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정도**를 비교한다.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높은 수요가 보수에 반영될 때 경제적 지대가 커지기 쉽다.

① 경찰: 교육·훈련과 선발을 거쳐 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보수는 공공부문의 보수체계에 크게 좌우된다. 특수한 개인 재능을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확보하려는 과정이 임금 결정의 주된 특징은 아니므로, 제시된 직업 중 경제적 지대의 영향이 가장 큰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② 교수: 전문지식과 연구능력의 축적에 시간이 필요하고 뛰어난 연구자의 공급은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지대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교육·연구 역량을 갖춘 인력의 양성이 가능하며 보수에는 자격·경력과 기관의 보수체계도 작용한다.

③ 전문경영인: 경영능력과 성과가 희소하면 상당한 경제적 지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전문경영 능력은 교육·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다른 경영인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이 직업에 경제적 지대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④ 프로스포츠 선수: 특히 뛰어난 선수의 경기력·흥행력은 개인에게 특수하고 단기간에 훈련으로 같은 수준의 선수를 대량 공급하기 어렵다. 구단과 관중의 수요가 높아질 때 **희소한 재능과 비탄력적인 공급**으로 높은 보수가 형성되므로 경제적 지대의 영향이 대표적으로 크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가장 적합한 직업은 프로스포츠 선수로, ④와 일치한다. 이는 제시된 직업의 전형적 특성을 비교한 것이며 모든 선수의 보수가 전액 지대이거나 모든 경영인보다 항상 지대가 크다는 의미는 아니다.

NoteBase

문 18. 가격차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제1급 가격차별은 소비자잉여를 모두 없애버리므로 파레토 비효율적이다.

② 제2급 가격차별은 독점기업이 소비자의 수요에 대한 불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제3급 가격차별은 시장 간 수요의 차이가 없더라도 재판매가 불가능하면 가능하다.

④ 개별 소비자의 유보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가격차별을 할 수 없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제2급 가격차별은 소비자별 지불의사를 직접 정확히 모르는 기업이 요금 메뉴를 제시하고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개별 유보가격을 완전히 알지 못해도 가격차별이 가능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제1급 완전가격차별에서는 기업이 각 단위의 최대 지불의사를 받아 소비자잉여를 흡수한다. 그러나 지불의사가 한계비용 이상인 단위까지 공급하므로, 표준 모형에서는 **효율적인 생산량이 달성**된다. 잉여가 소비자에게 남지 않는 분배 문제와 자중손실이 발생하는 효율성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② O: 제2급 가격차별은 기업이 각 소비자의 유형이나 지불의사를 직접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수량·품질 등에 따라 다른 요금 메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자기선택을 통해 수요 정보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③ X: 재판매를 막는 것은 싼 시장에서 사서 비싼 시장에 되파는 차익거래를 방지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제3급 가격차별로 서로 다른 이윤극대화 가격을 설정하려면 시장별 수요의 가격탄력성 등 수요 조건의 차이도 필요하다. 수요 조건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비용 아래 최적 가격도 같아지므로 **재판매 불가능만으로 가격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④ X: 개별 소비자의 각 단위 유보가격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제1급 완전가격차별이다. 개별 정보가 없어도 제2급에서는 메뉴를 통한 자기선택을 활용하고, 제3급에서는 관찰 가능한 집단별 수요 차이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불완전한 수요 정보 아래 자기선택을 활용하는 제2급 가격차별을 설명한 ②가 옳다.

NoteBase

문 19. 공유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누구나 소비에 대가 없이 참여할 수 있지만 한 소비자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은 소비할 수 없어 경합적이다.
나. 회복이나 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준이 유지될 경우에는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 남용을 막기 위해 소유권을 설정하거나 협약을 통해 효율적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가, 나, 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공유재는 남용되기 쉽지만 나처럼 **회복·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이 유지**되면 남용에 따른 자원 고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공유재의 비배제성·경합성과 남용을 줄이는 조건 및 관리 방법을 묻는다.

핵심 개념

공유재는 이용자를 배제하기 어렵지만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양을 줄이는 재화이다.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함께 가진다.
예를 들어 누구나 잡을 수 있는 바다의 물고기는 한 사람이 잡으면 다른 사람이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
공공재도 비배제적이지만 비경합적이라는 점에서 공유재와 다르다.
공유지의 비극은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유자원을 지나치게 이용하여 자원이 고갈되거나 훼손되는 문제이다.

NoteBase

보기 판단

가 O: '대가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비배제성, '한 소비자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은 소비할 수 없다'는 경합성을 나타낸다. 같은 자원 단위를 함께 소비할 수 없다는 뜻이며, 공유재 전체를 오직 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나 O: 회복·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이 유지된다는 조건에 주목한다. 이 경우 자원이 계속 줄어 고갈되는 공유지의 비극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문항의 '비효율'은 이러한 남용·고갈 문제의 맥락에서 이해한다. 지속가능성만으로 모든 경제적 비효율이 사라진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다 O: 소유권이나 이용권을 명확히 하면 자원 보전의 이익과 관리 책임을 연결할 수 있다. 이용자 간 협약으로 이용량이나 이용 방식을 정하는 것도 남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가와 나는 옳지만, 소유권 설정이나 협약을 통한 관리도 타당하므로 다를 빠뜨렸다. 다를 포함한 조합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가와 다는 옳지만, 회복·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이 유지된다는 나의 조건을 빠뜨렸다. 나를 포함한 조합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나와 다는 옳지만,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설명한 가를 빠뜨렸다. 가를 포함한 조합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가는 공유재의 특성, 나는 남용·고갈 문제가 생기지 않는 조건, 다는 남용을 줄이는 관리 방법을 설명하므로 모두 포함한 조합이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누구나 이용한다'는 말만 보고 공유재를 공공재로 판단하기 쉽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경합성이다. 또한 공유재는 남용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을 반드시 고갈된다는 설명으로 바꾸면 나의 '지속가능한 수준이 유지될 경우'라는 조건을 놓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이용자를 배제할 수 있는지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량을 줄이는지를 나누어 판단한다. 남용 여부를 묻는 보기에서는 회복·순환과 이용량 조절 조건을 확인한다. 관리 방법은 이용 권리·책임을 명확히 하거나 공동의 이용 규칙을 마련하는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공유재는 비배제성 + 경합성이다. 남용은 고갈을 부르고, 권리 설정과 협약은 남용을 줄인다.

NoteBase

문 20. 다음과 같이 어느 한 해 오직 빵 한 가지만을 최종소비재로 생산하는 A국의 국내총생산은? (단, 구입한 중간재는 생산과정에 모두 투입한다고 가정한다.)

- 농부가 재배한 밀을 10억 원에 제분업자에게 판매하였다.
- 제분업자는 밀가루를 만들어 제빵업자에게 25억 원에 판매하였다.
- 제빵업자는 빵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5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① 20억 원

② 30억 원

③ 35억 원

④ 40억 원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제빵업자의 부가가치가 5억 원이므로 최종재인 빵의 판매가치는 밀가루 구입액 25억 원에 이를 더한 **30억 원**이다. 중간재인 밀과 밀가루의 판매액을 다시 더하지 않는다.

계산 과정

국내총생산은 해당 연도에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재의 가치 또는 각 생산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합으로 계산한다. 밀과 밀가루는 빵 생산에 모두 투입되는 중간재이므로, **각 단계의 판매액을 그대로 더하면 중복계산**이 발생한다.

농부의 중간재 구입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밀 판매액 10억 원을 이 단계의 부가가치로 본다. 제분업자의 부가가치는 밀가루 판매액 25억 원에서 밀 구입액 10억 원을 뺀 15억 원이다. 제빵업자의 부가가치는 문제에서 직접 주어진 5억 원이다.

따라서 부가가치 합계는 다음과 같다.
GDP = 10+(25−10)+5 = 30억 원
최종재인 빵의 판매액도 중간재인 밀가루 구입액 25억 원에 제빵업자의 부가가치 5억 원을 더한 30억 원으로 같다. 따라서 국내총생산은 **30억 원**이며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21. 다음 중 국내총생산에 포함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국내 기업 폴리운수가 중고차를 매입한다.

② 국내 기업 알케미컬이 석유를 200배럴 수입한다.

③ 국내 투자자 광수가 1억 원의 국채를 매입한다.

④ 비영리기관 나눔재단이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비영리기관도 사무실용 건물을 취득하면 **실물투자**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생산가치가 해당 기간의 GDP에 포함되려면 **그 기간에 국내에서 새로 생산된 건물**이어야 하며, 기존 건물의 단순 매매와는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국내총생산(GDP)은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새로 생산된 최종재와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한다. 구매자가 누구인지보다 새로운 국내 생산을 반영하는 거래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① X: 폴리운수의 중고차 매입은 이미 생산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이다. 기업이 업무용으로 구입하더라도 **중고차 자체의 매매대금**은 새로운 국내 생산의 대가가 아니므로 해당 기간의 GDP에 다시 포함하지 않는다. 거래 과정에서 새로 제공된 중개서비스가 있다면 그 서비스의 가치는 별도로 포함한다.

② X: 알케미컬이 수입한 석유 200배럴은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이므로 그 수입액 자체는 국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기업이 구매했다는 사실과 국내에서 생산되었다는 사실은 다르다. 수입 석유를 이용해 국내에서 가공·유통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국내에서 새로 창출한 부가가치는 GDP에 포함된다.

③ X: 광수의 국채 1억 원 매입은 자금을 제공하고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금융거래**이다. 재화나 서비스를 새로 생산한 거래가 아니므로 국채 매입액 자체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가 조달한 자금으로 국내에서 새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그 생산가치가 GDP에 포함되는 것이지, 국채 매입액을 별도로 더하는 것은 아니다.

④ O: 나눔재단이 사무실로 계속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고정자산을 확보하는 투자이다. 비영리기관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투자가 GDP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다만 건물 생산가치를 해당 기간의 GDP에 포함하는 판단은 **해당 기간에 국내에서 새로 생산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원문에는 신축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④는 이 조건을 붙여 이해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의 소유권만 이전하는 거래라면 건물 자체의 매매대금을 GDP에 다시 포함하지 않으며, 토지가격도 새로 생산된 건물의 가치와 구별한다.

NoteBase

문 22. 물가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GDP디플레이터는 실질국내총생산을 명목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에 100의 곱으로 정의한다.

② 소비자물가지수는 기준연도에 생산된 최종재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라스파이레스지수이다.

③ GDP디플레이터는 비교연도에 생산된 최종재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파셰지수이다.

④ 수입품 가격은 소비자물가지수에는 포함되나 GDP디플레이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실질GDP×100**이다. ①은 분자와 분모를 뒤바꾸어 설명했다.

출제 포인트

GDP디플레이터의 계산식과 소비자물가지수의 수량 기준 및 측정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물가지수는 여러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수준을 기준연도와 비교한 지표이다. 기준연도의 지수는 100이다.
GDP디플레이터: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재와 서비스의 가격 수준을 나타낸다. 명목GDP는 비교연도 가격으로, 실질GDP는 기준연도 가격으로 같은 생산량을 평가하므로, 명목GDP실질GDP×100으로 가격 변화를 측정한다.
이 문제의 기준연도 가격 방식에서는 비교연도 생산량을 가중치로 쓰는 파셰지수이다.
소비자물가지수: 가계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수준을 나타낸다. 기준연도의 소비 바구니 수량을 고정하여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라스파이레스지수이다.
라스파이레스는 기준연도 수량, 파셰는 비교연도 수량을 사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실질국내총생산을 명목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은 분자와 분모가 반대이다. 올바른 식은 GDP디플레이터=명목GDP실질GDP×100이다. 생산량이 같고 가격만 오르면 명목GDP는 증가하지만 기준연도 가격으로 평가한 실질GDP는 그대로이므로, 디플레이터는 상승한다. 선지의 식으로는 오히려 값이 하락한다.

② O
소비자물가지수는 기준연도 소비 바구니의 수량을 고정하는 라스파이레스지수이다. 비교연도에도 같은 바구니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연도 비용과 비교한다. 측정 대상은 가계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이며, 기준연도에 생산된 모든 최종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③ O
GDP디플레이터의 분자인 명목GDP와 분모인 실질GDP에는 동일한 비교연도 생산량이 들어간다. 따라서 비교연도에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재와 서비스의 수량을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하는 파셰지수이다.

④ O
가계가 구입하는 수입 소비재는 소비 바구니에 들어가므로 그 가격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된다. GDP는 국내 생산을 측정하므로 수입품 자체는 GDP디플레이터의 측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답 포인트

①의 '실질GDP명목GDP'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환산할 때 가격 요인을 제거한다는 점과 혼동하기 쉽다. 가격 수준을 구하는 디플레이터는 명목GDP실질GDP이다. 또한 라스파이레스와 파셰를 구분할 때는 가격의 연도가 아니라 가중치로 사용하는 수량의 연도를 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계산식은 가격 상승 시 지수가 커지는지로 점검한다. 지수 유형은 기준연도 수량을 고정하면 라스파이레스, 비교연도 수량을 사용하면 파셰로 구분한다. 수입품은 소비 바구니에 포함되는지와 국내에서 생산되었는지를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디플레이터=명목실질×100. 소비자물가지수는 기준연도 소비 수량, GDP디플레이터는 비교연도 국내 생산량. 수입 소비재는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된다.

NoteBase

문 23. 어느 기업이 존속기간이 2년인 기계 1대를 구입하고 1년 후 1,100, 2년 후 1,210의 수익을 예상한다. 연간 이자율이 10%일 때, 이 기계의 존속기간 동안 얻는 기대수익의 현재가치는?

① 1,000

② 2,000

③ 2,100

④ 2,31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미래 수익을 **각 수령 시점까지 복리 할인**하여 더한다. $\frac{1,100}{1.10} + \frac{1,210}{(1.10)^2} = 2,000$이다.

계산 과정

현재가치의 기준: 미래의 수익을 현재의 같은 시점으로 환산한 뒤 더한다. 연간 이자율이 r일 때 t년 후 수익 R_t의 현재가치는 $\frac{R_t}{(1+r)^t}$이다. **수익을 받기까지의 기간만큼 복리로 할인**하며, 이 문제에서는 $r = 0.10$을 두 해에 적용한다.

1년 후 수익: $PV_1 = \frac{1,100}{1.10} = 1,000$이다. 현재 1,000을 연 10%로 운용하면 1년 후 1,100이 되는 관계를 거꾸로 계산한 것이다.

2년 후 수익: $PV_2 = \frac{1,210}{(1.10)^2} = \frac{1,210}{1.21} = 1,000$이다. 두 해 뒤 수익이므로 **할인에 사용하는 분모는 1.10이 아니라 1.21**이다.

합산과 결과: $PV = PV_1 + PV_2 = 1,000 + 1,000 = 2,000$이므로 ②와 일치한다. 1,000은 한 해의 수익만 환산한 값이고, 2,310은 할인하지 않은 수익의 단순합이다. 두 번째 수익까지 한 해만 할인하면 2,100이 되므로 수령 시점을 구별해야 한다. 별도 화폐단위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기계 구입비를 뺀 순현재가치가 아니라 주어진 기대수익의 현재가치를 구한 것이다.

NoteBase

문 24. A국의 경제활동인구가 100만 명, 실업자가 4만 명, 실직률이 1%일 때, 구직률과 안정상태의 실업률은?

① 구직률: 22%, 안정상태의 실업률: 2%

② 구직률: 22%, 안정상태의 실업률: 4%

③ 구직률: 24%, 안정상태의 실업률: 2%

④ 구직률: 24%, 안정상태의 실업률: 4%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주어진 인원을 안정상태로 해석하면 **실직자 수와 구직 성공자 수가 같다**. $0.01 \times 96 = f \times 4$에서 구직률은 24%, 안정상태 실업률은 4%이다.

계산 과정

안정상태 조건: 이 문항은 주어진 실업자 수를 안정상태의 값으로 해석하여 푼다. 경제활동인구가 일정한 취업·실업 간 이동 모형에서 안정상태는 **실직하여 들어오는 인원과 구직하여 나가는 인원이 같은 상태**이다. 실직률을 s, 구직률을 f, 취업자를 E, 실업자를 U라 하면 $sE = fU$이다.

구직률 계산: 경제활동인구 100만 명 중 실업자가 4만 명이므로 취업자는 96만 명이다. 실직자는 $0.01 \times 96 = 0.96$만 명, 즉 9,600명이다. 안정상태에서는 실업자 4만 명 중 같은 수가 취업하므로 $f = \frac{0.96}{4} = 0.24 = 24\%$이다. **실직률의 분모는 취업자, 구직률의 분모는 실업자**임을 구별한다.

안정상태 실업률: $E = L - U$를 $sE = fU$에 대입하면 $s(L - U) = fU$이므로 $u^* = \frac{U}{L} = \frac{s}{s+f}$이다. 따라서 $u^* = \frac{0.01}{0.01 + 0.24} = 0.04 = 4\%$로, 주어진 $\frac{4}{100}$과 일치한다.

결과 연결: 구직률 24%, 안정상태 실업률 4%이므로 ④와 일치한다. 두 비율은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주어진 실업자 수가 안정상태의 값이라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 실업자 수와 실직률만으로 구직률을 구할 수 없으므로, 유입과 유출을 같게 놓는 조건이 풀이의 핵심이다.

NoteBase

문 25. 총소득이 7,500만 원인 고소득 가구가 있고 총소득이 2,400만 원인 저소득 가구가 있다. 두 가구의 소비함수가 $C = 500 + 0.8Y$로 같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비는 C이고 총소득은 Y이다.)

① 한계소비성향은 두 가구 모두 동일하다.

② 두 가구 모두 평균소비성향이 항상 한계소비성향보다 높다.

③ 고소득 가구로부터 만 원을 걷어 저소득 가구에 주면 총소비가 증가한다.

④ 평균소비성향이 두 가구 모두 소득이 증가하면서 하락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두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이 모두 0.8**이므로 1만 원을 이전하면 고소득 가구의 소비 감소와 저소득 가구의 소비 증가가 각각 0.8만 원으로 상쇄된다. 총소비는 증가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금액을 만 원 단위로 쓰면 두 가구 모두 $C = 500 + 0.8Y$이다. 한계소비성향은 소득 증가분 중 소비 증가분의 비율이고, 평균소비성향은 총소득 중 소비액의 비율이다. 두 개념을 구별해야 한다.

① O: 두 소비함수의 소득 계수는 모두 0.8이다. 소득이 1만 원 증가하면 소비가 0.8만 원 늘어나므로 **한계소비성향은 모두 0.8**이다.

② O: 양의 소득 Y에 대해 평균소비성향은 $\frac{C}{Y} = \frac{500}{Y} + 0.8$이다. 자율소비 500이 양수이므로 $\frac{500}{Y} > 0$이고, 평균소비성향은 한계소비성향 0.8보다 높다. Y=0에서는 평균소비성향 자체가 정의되지 않으므로 이 비교는 양의 소득 범위에 적용한다.

③ X: 고소득 가구의 소득을 1만 원 줄이면 소비가 0.8만 원 줄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1만 원 늘리면 소비가 0.8만 원 늘어난다. 두 변화가 상쇄되므로 **총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저소득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더 높더라도 이전소득의 소비 효과는 한계소비성향으로 판단해야 한다.

④ O: 평균소비성향 $\frac{500}{Y} + 0.8$에서 소득 Y가 증가하면 $\frac{500}{Y}$가 작아진다. 따라서 두 가구 모두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며, 한계소비성향 0.8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이전으로 총소비가 증가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

NoteBase

문 26. 케인즈(Keynes)의 유동성선호 동기 중 이자율과 관련된 동기로 옳은 것은?

① 투기적 동기

② 거래적 동기

③ 예비적 동기

④ 교환의 매개 동기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투기적 동기는 화폐와 채권 중 무엇을 보유할지 선택하려는 동기로, **이자율에 따라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달라진다**는 점과 관련된다.

개념 구분

투기적 동기는 화폐와 채권 사이에서 자산 보유 형태를 선택하려는 동기이다. 이자율은 화폐를 보유하며 포기하는 수익, 즉 기회비용이므로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기적 화폐수요는 감소**한다. 반대로 이자율이 낮으면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작아져 화폐를 더 보유하려 한다.

거래적 동기는 일상적인 재화·서비스의 구입과 결제에 필요한 화폐를 보유하려는 동기이다. 케인즈의 기본적인 구분에서는 주로 소득과 거래 규모에 좌우된다.

예비적 동기는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지출 등 **예상하지 못한 지급에 대비**하여 화폐를 보유하려는 동기이다. 기본 모형에서는 거래적 동기와 함께 주로 소득 수준과 관련된다.

교환의 매개는 화폐가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말하며, 케인즈의 세 가지 유동성선호 동기에 별도로 추가되는 동기가 아니다. 거래를 위해 화폐를 보유한다는 점은 거래적 동기와 연결된다.

따라서 이자율과 관련된 동기는 ① 투기적 동기이다.

NoteBase

문 27. 어느 경제의 통화량이 현금통화와 예금통화의 합으로 정의된다. 지급준비금이 200조 원, 필요지급준비율이 10%, 초과지급준비율이 10%일 때, 통화승수와 통화량은? (단, 민간은 현금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① 통화승수: 5, 통화량: 1,000조 원

② 통화승수: 5, 통화량: 2,000조 원

③ 통화승수: 10, 통화량: 1,000조 원

④ 통화승수: 10, 통화량: 2,000조 원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민간 현금이 없으므로 통화승수는 **필요·초과지급준비율 합계의 역수**이다. $m = \frac{1}{0.10 + 0.10} = 5$, 통화량은 $5 \times 200 = 1{,}000$조 원이다.

계산 과정

준비율 합산: 예금통화를 D, 지급준비금을 R라 하자. 필요지급준비율과 초과지급준비율은 모두 예금 대비 비율이므로 실제 준비율은 $r = 0.10 + 0.10 = 0.20$이다. 따라서 $R = 0.20D$이며 **초과지급준비금도 통화 확대를 제한**하므로 필요준비율만 사용하면 안 된다.

통화승수: 현금통화를 C, 본원통화를 B, 통화량을 M이라 하면 $B = C + R$, $M = C + D$이다. 민간이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C = 0$, 따라서 $B = R$, $M = D$이다. 통화승수는 $m = \frac{M}{B} = \frac{D}{R} = \frac{1}{0.20} = 5$로 단위가 없는 배수이다.

통화량: 주어진 지급준비금 200조 원은 **민간 현금이 없는 이 조건에서 본원통화**와 같다. 따라서 $M = mB = 5 \times 200 = 1{,}000$조 원이다. 검산하면 예금 1,000조 원의 필요준비금은 100조 원, 초과준비금도 100조 원으로 합계 200조 원이 된다.

결과 연결: 통화승수 5, 통화량 1,000조 원이므로 ①과 일치한다. 승수 10과 통화량 2,000조 원은 초과지급준비율을 빠뜨리고 필요준비율 10%만 반영했을 때 나오는 값이다.

NoteBase

문 28. 폐쇄경제인 한 나라의 한계소비성향이 0.8이고, 소득이 없을 때 소비가 150이다. 투자가 50이고 정부가 세금으로 80을 걷고 100을 지출할 때 균형생산량은 Y이다. 이 균형에서 세금과 정부지출을 똑같이 20을 늘린다면 새로운 균형생산량이 Y^*로 변한다. (Y, Y^*)는 얼마인가?

① $(Y, Y^*)=(1180,1180)$

② $(Y, Y^*)=(1180,1200)$

③ $(Y, Y^*)=(1200,1180)$

④ $(Y, Y^*)=(1200,12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처음에는 $Y = 150 + 0.8(Y - 80) + 50 + 100$에서 $Y = 1{,}180$이다. **정부지출과 정액세를 같은 금액만큼 늘리는 균형재정승수는 1**이므로 새 생산량은 20 증가한 1,200이다.

계산 과정

소비함수 설정: 자율소비 150, 한계소비성향 0.8인 단순 케인스 모형에서 소비는 **세금을 뺀 가처분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C = 150 + 0.8(Y - T)$이며 처음 세금이 80이므로 $C = 150 + 0.8(Y - 80)$이다. 투자와 정부지출은 주어진 값으로 고정한다.

처음 균형생산량: 폐쇄경제의 재화시장 균형은 $Y = C + I + G$이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Y = 150 + 0.8(Y - 80) + 50 + 100 = 236 + 0.8Y$이다. 따라서 $0.2Y = 236$, $Y = 1{,}180$이다.

정책 변화 후 균형: 세금은 100, 정부지출은 120이 된다. 새 균형식은 aligned&Y^*=150+0.8(Y^*-100)&+50+120=240+0.8Y^*aligned 이므로 $0.2Y^* = 240$, $Y^* = 1{,}200$이다.

승수 검산과 결과: 정액세와 정부지출을 각각 20 늘리면 정부지출이 직접 20 증가하고 소비가 처음에 $0.8 \times 20 = 16$ 감소한다. 순수한 자율지출 증가는 4이며 지출승수 $\frac{1}{1-0.8} = 5$를 적용하면 소득은 20 증가한다. 즉 이 모형에서 **같은 금액의 정부지출·정액세 증가는 그 금액만큼 소득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Y, Y^*) = (1{,}180, 1{,}200)$으로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29. 경기변동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제의 국내총생산이 장기추세선보다 높을 때 호황기라 한다.

② 국내총생산과 실업률 사이에는 공행성(comovement)이 있다.

③ 경기변동은 주기적이며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④ 실제 국내총생산과 장기추세선의 차이를 GDP갭이라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경기는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지만 **일정한 간격과 크기로 규칙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경기변동의 반복성과 규칙적인 주기성은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이 문항처럼 장기추세를 기준으로 경기 수준을 구분하면, 실제 국내총생산이 추세선보다 높은 구간은 경제활동이 통상적인 추세보다 활발한 호황에 해당한다. 이는 **생산 수준이 추세를 웃도는지**에 대한 판단이며 생산량이 전기보다 늘고 있는지를 뜻하는 확장 국면과는 구분할 수 있다.

② O: 공행성은 여러 경제변수가 경기변동과 연관되어 함께 변하는 성질로, 반드시 같은 방향이라는 뜻은 아니다. 생산이 추세보다 활발하면 노동수요가 늘어 실업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GDP와 실업률은 **통상 역방향의 공행성**을 보인다. 실업률은 경기역행적 변수이다.

③ X: 경기변동은 확장과 수축이 되풀이되지만 **간격·지속기간·변동 폭이 일정하지 않다**. 충격의 종류와 크기, 정책 대응 등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므로 반복된다는 사실을 일정한 주기로 규칙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④ O: 문항의 장기추세 기준에서는 GDP갭을 실제 생산과 추세 생산의 차이 $Y - Y_{trend}$로 나타낸다. 실제 생산이 추세보다 높으면 양의 갭, 낮으면 음의 갭이다. 정책 분석에서는 잠재GDP를 기준으로 산출갭을 정의하고 그 대비 비율로 표시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실제 생산과 기준 생산 사이의 차이**라는 뜻이다.

NoteBase

문 30.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상된 인플레이션하에서 생산과 고용은 불변한다.

② 예상된 인플레이션하에서 메뉴비용과 구두창비용이 발생한다.

③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하에서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 소득재분배가 나타난다.

④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하에서 노동자는 이득을 보고 기업은 손해를 본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명목임금이 고정된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한 물가상승이 일어나면 **실질임금이 하락**한다. 이때 노동자의 구매력은 줄고 기업의 실질임금 부담은 낮아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예상하고 명목임금과 가격 등이 그에 맞게 조정되는 기본 모형에서는 실질임금 등 실질변수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상된 물가상승만으로 생산과 고용이 변하지 않는다**. 이는 인플레이션에 사회적 비용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② O: 메뉴비용은 가격표·가격정보를 변경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구두창비용은 화폐 보유를 줄이려고 인출·이체 등 자금관리를 더 자주 하는 데 드는 시간과 불편 등의 비용이다. 물가상승을 미리 예상하더라도 가격 변경과 현금 관리가 필요하므로 두 비용은 발생할 수 있다.

③ O: 명목액이 고정된 채무에서 물가가 예상보다 높아지면 상환액의 실질가치가 줄어든다. 채권자는 예상보다 구매력이 작은 돈을 돌려받고 채무자는 실질상환부담이 줄어들므로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실질부가 이전**된다.

④ X: 명목임금이 계약으로 정해져 바로 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물가상승이 발생하면 실질임금은 하락한다. 노동자의 구매력은 줄고 기업의 실질임금 부담은 낮아지므로, 이 임금 경로에서는 **노동자가 손해를 보고 기업이 이득을 본다**. 선지는 그 방향을 반대로 설명했다.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의 임금 재분배 방향을 바꾸어 설명한 ④가 옳지 않다.

NoteBase

문 31. 다음 중 구조적 실업의 예로 옳은 것은?

① 택시 운전기사인 영철은 택시 회사에서 해고된 지 3개월 후 구직을 포기하였다.

② 데이터 과학자로 일하던 다혜가 경기후퇴로 일자리를 잃었다.

③ 3주 전에 대학을 졸업한 수호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

④ 보미는 거주지의 유아가 급감하면서 어린이집 교사 일자리를 잃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구조적 실업은 산업·기술·인구구조 변화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맞지 않아 발생한다. 유아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교사 수요의 감소**가 이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구직을 포기하여 더 이상 일자리를 찾지 않는 사람은 통상적인 노동력 통계에서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 해고 후 3개월이라는 기간만으로 구조적 실업을 판정할 수 없으며, 문항에는 산업·기술·인구구조 변화로 일자리와 능력 사이의 불일치가 생겼다는 원인도 제시되지 않았다.

② X: 경기후퇴로 소비·투자 등 총수요가 줄면서 기업의 생산과 고용이 감소한 경우는 **경기적 실업**이다. 직업이 데이터 과학자라는 점이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원인이 경기후퇴라는 점이 분류 기준이다.

③ X: 졸업 후 일자리를 탐색하고 구직자와 기업이 적합한 상대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려 생기는 것은 **마찰적 실업**이다. 졸업한 지 3주라는 기간 자체가 모든 사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항에는 구조적 수급 불일치보다 신규 진입자의 탐색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④ O: 지역의 유아 수 감소는 보육서비스와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수요를 줄인다. 이는 일시적인 경기후퇴가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특정 직종의 노동수요 감소**로, 노동자가 다른 직무나 지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수급 불일치가 나타나는 구조적 실업의 사례이다.

NoteBase

문 32.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초기 균형이 장기균형 상태에 있다.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할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시적인 음(-)의 공급충격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② 정책당국이 단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경우 실업률도 안정화된다.

③ 정책당국은 단기적으로 물가와 국민소득을 동시에 안정시킬 수 없다.

④ 정책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장기적으로 물가는 하락하고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유가 상승에 따른 공급충격 후 물가를 낮추려고 총수요를 줄이면 **생산과 고용이 더 감소**한다. 따라서 물가 안정과 실업률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O: 유가는 생산비를 구성하므로 유가가 오르면 같은 물가에서 기업이 공급하려는 생산량이 줄어 단기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총수요가 그대로이면 **물가는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감소**하여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② X: 불리한 공급충격 뒤 물가를 원래 수준으로 낮추려고 긴축정책을 실시하면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물가상승 압력은 줄지만 생산과 고용은 더 감소하므로 **실업률은 오히려 상승**한다. 물가 안정이 실업률 안정까지 동시에 가져오지는 않는다.

③ O: 이 모형에서 공급충격에 대응하는 총수요 관리에는 상충관계가 있다. 확대정책으로 총수요를 늘리면 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대신 물가가 더 상승하고, 긴축정책으로 물가를 낮추면 소득 감소가 커진다. 따라서 단기적인 총수요 조절만으로 두 변수를 동시에 충격 이전 수준에 복귀시킬 수 없다.

④ O: 일시적 공급충격이고 장기 잠재생산량이 변하지 않는 표준 모형에서는 충격의 해소와 임금·생산비의 조정을 통해 단기총공급이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총수요가 유지되면 **충격 직후에 비해 물가는 하락하고 소득은 증가**하여 장기균형으로 회복한다. 이는 원래 장기균형보다 물가가 더 낮아지고 소득이 더 높아진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물가 안정 정책이 실업률까지 안정시킨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NoteBase

문 33.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도한다.

②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

③ 정부가 소비지출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를 인하한다.

④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소비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중앙은행의 국채 매도는 시중 자금을 흡수하는 긴축정책이다. 표준 모형에서 이자율 상승과 지출 감소를 통해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선지별 해설

① O: 표준적인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중앙은행의 국채 매도는 민간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시중 유동성과 은행 준비금을 흡수하는 긴축적 통화정책이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와 이자율에 민감한 소비가 줄어 **각 물가수준에서 총수요가 감소**하므로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② X: 지급준비율 인하는 예금 중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준비금 비중을 낮춰 은행의 대출·신용창출 여력을 늘린다. 표준 모형에서는 통화공급 확대와 이자율 하락을 통해 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방향이다. 실제 효과의 크기는 은행의 대출과 민간의 차입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X: 소득세를 인하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므로 **소비 증가를 통해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며, 왼쪽 이동 정책이 아니다.

④ X: 소비장려금은 가계의 구매력을 높이거나 소비의 유인을 강화하여 소비지출을 늘리는 정책이다. 따라서 표준 모형에서는 **총수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전지출 형태의 장려금 자체를 정부의 재화·서비스 구매와 동일시하지 않고, 가계 소비를 통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문 34. IS-LM 모형에서 이자율과 생산량이 균형상태에 있다. 이자율이 반드시 상승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하고 LM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재정정책: 확장적, 통화정책: 확장적

② 재정정책: 확장적, 통화정책: 긴축적

③ 재정정책: 긴축적, 통화정책: 확장적

④ 재정정책: 긴축적, 통화정책: 긴축적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은 모두 **균형이자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두 정책을 함께 실시하면 이자율은 반드시 상승한다.

핵심 풀이

IS곡선은 재화시장의 균형을, LM곡선은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낸다. 문제의 우하향 IS·우상향 LM 조건에서 각 정책이 균형이자율에 미치는 방향을 비교한다.

① 확장적 재정정책은 정부지출 증가나 감세로 IS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이자율을 올린다. 확장적 통화정책은 통화공급 증가로 LM곡선을 오른쪽·아래쪽으로 이동시켜 이자율을 내린다. 두 효과가 반대이므로 이자율 변화는 정책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② 확장적 재정정책은 IS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이자율을 올리고, 긴축적 통화정책은 통화공급 감소로 LM곡선을 왼쪽·위쪽으로 이동시켜 이자율을 올린다. **두 정책의 이자율 상승 효과가 같은 방향**이므로 이자율은 반드시 상승한다. 생산량에 대해서는 두 정책의 효과가 반대이므로 변화 방향이 확정되지 않는다.

③ 긴축적 재정정책은 IS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이자율을 내리고, 확장적 통화정책 역시 이자율을 내린다. 따라서 이 조합에서는 이자율이 하락한다.

④ 긴축적 재정정책의 이자율 하락 효과와 긴축적 통화정책의 이자율 상승 효과가 서로 반대이다. 따라서 정책의 상대적 크기를 모르면 이자율의 변화 방향을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자율이 반드시 상승하는 조합은 ②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이다.

NoteBase

문 35.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내부시차와 외부시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부시차 - 재정정책: 길다, 통화정책: 짧다

② 내부시차 - 재정정책: 짧다, 통화정책: 길다

③ 외부시차 - 재정정책: 길다, 통화정책: 짧다

④ 외부시차 - 재정정책: 길다, 통화정책: 길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재량적 재정정책은 입법·예산 절차 때문에 내부시차가 길고,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비교적 신속히 결정·집행한다. 따라서 **내부시차는 재정정책이 길고 통화정책이 짧다**.

선지별 해설

내부시차는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 뒤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을 결정·집행하기까지의 시간이며, 외부시차는 집행된 정책이 실물경제에 효과를 내기까지의 시간이다. 다음 비교는 자동안정화장치가 아니라 일반적인 재량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상대적 특징을 기준으로 한다.

① O: 재량적 재정정책은 세법 개정이나 예산 심의 등 입법·행정 절차가 필요하므로 내부시차가 길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정책을 결정하고 금융시장 조작 등을 비교적 신속히 집행할 수 있어 **내부시차가 재정정책보다 짧은 편**이다.

② X: 일반적인 상대적 관계를 반대로 설명했다. 재량적 재정정책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내부시차가 길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비교적 짧다. 다만 누진세·실업급여 등 **자동안정화장치는 새 정책 결정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도로 구별해야 한다.

③ X: 표준적인 비교에서는 실제로 집행된 정부지출은 총수요에 직접 반영되어 재정정책의 외부시차가 짧은 편이다. 통화정책은 금리·자산가격·신용조건의 변화가 민간의 소비·투자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치므로 **외부시차가 비교적 길다**. 제시된 길고 짧음의 방향이 반대이다.

④ X: 통화정책의 외부시차가 길다는 부분은 표준적인 설명과 맞지만, 재정정책까지 동일하게 길다고 한 부분은 맞지 않는다. 문항의 일반적 비교는 **재정정책의 외부시차는 짧고 통화정책은 길다**이다. 실제 정책의 종류, 사업 집행과 민간 반응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기간 법칙은 아니다.

NoteBase

문 36. 기술진보가 없는 단순한 솔로우(Solow)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을 가정한다.

② 균제상태에서 경제성장률은 인구증가율보다 크다.

③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1인당 자본량의 균제상태의 값이 자본의 황금률수준이다.

④ 인구증가를 고려한 경우 자본의 황금률수준에서 자본의 한계생산물은 감가상각률과 인구증가율의 합과 같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기술진보가 없는 균제상태에서는 1인당 생산이 일정하므로 **총생산 증가율은 인구증가율과 같다**. 인구보다 더 빠른 지속적 총생산 성장을 설명하려면 이 조건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단순한 솔로우 모형의 총생산함수 $Y = F(K, L)$는 자본 K와 노동 L을 같은 비율로 늘리면 산출량도 그 비율만큼 늘어나는 규모수익불변을 가정한다. 이는 다른 투입요소를 고정한 상태의 자본 한계생산물 체감과 모순되지 않는다.

② X: 기술진보가 없을 때 균제상태에서는 1인당 자본 $k = \frac{K}{L}$과 1인당 생산 $y = \frac{Y}{L}$이 일정하다. 따라서 노동이 인구와 같은 비율 n으로 증가하면 총생산도 n으로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은 인구증가율과 같다**. 1인당 생산의 성장률은 0이다.

③ O: 자본의 황금률수준은 여러 균제상태 중에서 지속 가능한 **1인당 소비를 최대화**하는 1인당 자본량이다. 생산량 자체의 최대화가 아니라 자본 유지에 필요한 투자를 뺀 소비의 최대화가 기준이다.

④ O: 기술진보가 없고 인구증가율이 n, 감가상각률이 δ이면 균제상태의 1인당 소비는 $c = f(k) - (\delta + n)k$이다. 1인당 자본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감가상각과 인구증가를 모두 보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부 최댓값의 조건은 $f'(k) = \delta + n$이므로, 황금률수준의 자본 한계생산물은 감가상각률과 인구증가율의 합과 같다.

따라서 균제상태의 경제성장률이 인구증가율보다 크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NoteBase

문 37. 2국(A국, B국), 2재화(X재, Y재) 리카르도(Ricardo) 교역모형을 고려하자. 아래 표는 각 재화 생산을 위해 필요한 각국의 단위당 노동투입량과 부존노동량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노동투입량		총부존노동량
	X재	Y재	
A국	1	2	100
B국	4	4	200

① A국은 Y재에, B국은 X재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② B국은 A국에 비해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를 갖는다.

③ X재 한 단위와 Y재 2/3단위를 교환하면 양국 모두 무역의 이득을 얻는다.

④ A국이 생산가능한 조합은 모두 B국에서도 가능하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X재 한 단위의 기회비용은 A국에서 Y재 $\frac{1}{2}$단위, B국에서 1단위이다. 교환비율 $\frac{2}{3}$이 **두 기회비용 사이에 있으므로 양국 모두 교역이득**을 얻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표의 수치는 생산량이 아니라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이다. A국은 X재에 1, Y재에 2의 노동이 필요하고 총노동은 100이며, B국은 두 재화에 각각 4의 노동이 필요하고 총노동은 200이다.

① X: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에 있다. X재 한 단위를 생산할 때 포기하는 Y재는 A국에서 $\frac{1}{2}$단위, B국에서 $\frac{4}{4}=1$단위이다. 따라서 A국은 X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반대로 Y재 한 단위의 기회비용은 A국에서 X재 2단위, B국에서 1단위이므로 B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② X: 절대우위는 같은 재화 한 단위를 **더 적은 노동으로 생산**하는 국가에 있다. X재는 A국의 1이 B국의 4보다 작고, Y재도 A국의 2가 B국의 4보다 작다. 따라서 두 재화 모두 A국이 절대우위를 갖는다. B국의 총부존노동량이 더 크다는 사실은 단위당 생산성의 우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③ O: X재 한 단위당 Y재 $\frac{2}{3}$단위의 교환비율은 $\frac{1}{2}<\frac{2}{3}<1$로 **양국의 X재 기회비용 사이**에 있다. A국은 Y재 $\frac{1}{2}$단위를 포기해 만든 X재로 더 많은 Y재 $\frac{2}{3}$단위를 얻는다. B국은 X재를 직접 만들려면 Y재 1단위를 포기해야 하지만 교역에서는 $\frac{2}{3}$단위만 내면 되므로 양국 모두 이득을 얻는다.

④ X: A국의 생산가능 조건은 $X+2Y\le 100$, B국은 $4X+4Y\le 200$, 즉 $X+Y\le 50$이다. A국은 $(X,Y)=(100,0)$을 생산할 수 있지만 B국의 X재 최대 생산량은 $\frac{200}{4}=50$이다. 따라서 **A국의 모든 생산가능 조합을 B국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38. 한국과 미국의 연간 이자율이 각각 5%와 2%이고, 1년 후 환율이 달러당 1,030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율평형 조건이 성립할 때, 외환시장의 균형환율은 얼마인가?

① 900원

② 950원

③ 1,000원

④ 1,050원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통상적인 근사 이자율평형식에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 3%는 **예상 원화 절하율 3%**와 같다. 따라서 현재 환율은 1,030÷1.03=1,000원/달러이다.

계산 과정

현재 원/달러 환율을 E, 1년 후 예상 환율을 $E^e = 1{,}030$원/달러라고 하자.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원화 가치의 하락을 뜻한다. 국내 이자율은 i=0.05, 미국 이자율은 $i^* = 0.02$이다.

위험 프리미엄 등을 제외한 이자율평형에서는 국내 자산 수익률과 원화로 평가한 해외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같아야 한다. 통상 사용하는 근사식은 $i - i^* = \frac{E^e - E}{E}$이다. 즉 **국내외 금리 차이 3%를 예상 원화 절하율이 보상**한다.

수치를 대입하면 $0.05 - 0.02 = \frac{1{,}030 - E}{E}$이다. 이를 정리하면 $0.03E = 1{,}030 - E$, $1.03E = 1{,}030$이므로 $E = 1{,}000$원/달러이다.

엄밀히 복리 수익률을 맞추는 식은 $1 + i = (1 + i^*)\frac{E^e}{E}$이므로 $E = 1{,}030 \times \frac{1.02}{1.05} \approx 1{,}000.57$원/달러이다. 근사식에서는 정확히 1,000원이고 엄밀식에서도 제시된 값 중 1,000원이 가장 가까우므로, 이 문항은 통상적인 근사 이자율평형식을 적용하는 계산이다.

따라서 선택지에서는 ③ 1,000원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39.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국개방경제를 가정한다.

② 확장적 재정정책의 소득증대 효과는 변동환율제도보다 고정환율제도에서 더 크다.

③ 변동환율제도하에서 정부지출의 증가는 환율과 국민소득을 상승시킨다.

④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통화공급의 증가는 환율을 하락시키고 국민소득을 상승시킨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변동환율제의 표준 먼델·플레밍 모형에서는 정부지출 증가가 통화 절상과 순수출 감소를 초래한다. **순수출 감소가 재정확대를 상쇄하므로 국민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완전한 자본이동과 주어진 세계이자율, 단기 고정물가를 사용하는 표준 먼델·플레밍 모형을 기준으로 한다. 이 문항의 환율은 자국통화 1단위의 외국통화 표시가치로 읽는다. 이 표시법에서는 환율 상승이 자국통화 절상, 하락이 절하이다. 외국통화 1단위당 자국통화 가격으로 표시하면 상승·하락의 표현이 반대가 된다.

① O: 소국은 세계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바꿀 수 없고, 완전한 자본이동 아래에서는 자본이 수익률 차이에 반응한다. 표준 모형에서 국내이자율 r은 **주어진 세계이자율** r^*과 같아진다. 국가위험이나 예상환율 변동에 따른 별도의 수익률 차이는 이 단순 모형에서 제외한다.

② O: 변동환율제에서 정부지출이 늘면 금리 상승 압력과 자본유입이 자국통화 절상을 가져와 순수출을 줄인다. 그 결과 재정확대의 소득 효과가 상쇄된다. 반면 고정환율제에서는 중앙은행이 절상 압력을 막으려고 외환을 매입하고 자국통화를 공급하므로 **통화공급이 재정확대를 뒷받침해 소득이 증가**한다.

③ X: 변동환율제에서 재정확대는 자국통화를 절상시킨다. 문항의 표시법에서 환율 상승 방향은 맞지만, **순수출 감소가 정부지출 증가를 상쇄하여 국민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환율과 국민소득이 모두 상승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이 결론은 완전자본이동 등 표준 모형의 조건 아래 성립한다.

④ O: 변동환율제에서 통화공급이 늘면 금리 하락 압력으로 자본이 유출되고 자국통화가 절하된다. 절하는 국내재화의 상대적 가격을 낮춰 순수출과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자국통화의 외국통화 표시가치가 하락**하므로 문항의 환율 표시법에서는 환율 하락으로 표현한다.

NoteBase

문 40. 환율이 달러당 1,000원에서 달러당 900원으로 하락할 때, 이에 따른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한국과 미국의 물가수준이 고정되어 있고 J-곡선효과는 없다고 가정한다.)

① 원화의 가치가 10% 절상한다.

② 미국의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③ 실질환율은 명목환율에 비례하여 하락한다.

④ 한국의 원화 표시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달러 표시 수출가격이 하락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같은 달러 금액의 수입품을 사는 데 필요한 원화는 줄고, 같은 원화 가격의 수출품을 사는 데 필요한 달러는 늘어난다. 따라서 ④의 가격 변화는 반대이며, **원화 표시 수입가격은 하락**하고 **달러 표시 수출가격은 상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원화가 절상된다는 방향은 맞으며, '10%'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률을 기준으로** 읽어야 한다. 환율은 $\frac{1,000-900}{1,000}\times 100 = 10\%$ 하락한다. 다만 원화 1단위의 달러 표시 가치 상승률을 엄밀히 계산하면 $\left(\frac{1,000}{900}-1\right)\times 100 \approx 11.1\%$이다. 환율 하락률과 그 역수인 원화 가치의 상승률은 구분해야 한다.

② O: 원화 절상은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화의 상대적 가치 하락이다. 미국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낮아지고 한국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높아지므로, 미국의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문항처럼 **J-곡선효과를 배제**한 통상적인 수출입 반응에서는 미국의 순수출 증가가 경상수지 개선으로 이어진다.

③ O: 명목환율 e를 달러당 원화 금액, 한국 물가를 P, 미국 물가를 P^*라고 하면 실질환율은 $q = e\frac{P^*}{P}$이다. 이는 미국 상품의 가격을 원화로 환산한 뒤 한국 상품의 가격과 비교한 값이다. **두 나라의 물가수준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물가비율이 일정하고, 명목환율이 10% 하락하면 실질환율도 같은 비율로 하락한다.

④ X: 원화 표시 수입가격과 달러 표시 수출가격의 변화 방향이 모두 반대이다. 미국 상품의 달러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면 원화 표시 수입가격은 그 달러 가격에 원/달러 환율을 곱한 값이므로 **환율 하락에 따라 낮아진다**. 한국 상품의 원화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면 달러 표시 수출가격은 그 원화 가격을 원/달러 환율로 나눈 값이므로 **환율 하락에 따라 높아진다**.

NoteBase